

2020년 02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56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년 02 (Vol.56)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0년 3월 2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송유미, 백혜인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0년 02 (Vol.56)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 국토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공포
-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중대 변경요건에서 경미요건으로 완화
-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 규제샌드박스 시행
-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입법예고

6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 문체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발표
- 대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위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실시
- 경기도, 제1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충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전략 수립

8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 서울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자금 올해160억 융자 지원
- 서울시, 건축자산 정책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 서울시, '기생충' 속 '반 지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대구시, 빈집 1만여호 전수조사 실시
대구시, 시민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대
인천시, 2020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대전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
대전시, 도심 내 훼손지역 생태 휴식공간으로 조성
대전시, 2020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 2020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
충남도, 중부물류센터 '소통협력공간'으로 탈바꿈
경남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규 추진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4

새만금청, 현실 도시문제 예측 위한 가상도시 구축·활용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불공정·과열 경쟁 선제적 조치
대전시, 4차산업혁명 녹아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대전시, 전국 최초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경기도,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집중관리 계획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통합관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가동
제주도, 대중교통 이동형 IoT 통합 정보 구축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02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완료

진행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국토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건축안전팀, 2020.02.05.

앞으로 연면적 3,000m²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진행

건축
정책

안전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자는 점검 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The infographic provides a summary of the Building Management Law, including its key features and implementation details:

- Building Management Law Key Points:**
 - Structural safety, fire safety, energy efficiency, etc., inspection by certified professionals (Architects, Engineers, Technicians).
 - Inspection cycle: First inspection within 5 years of completion, followed by inspections every 3 years thereafter.
 - Inspection scope includes large-scale integrated buildings (over 3,000m²), construction structures, and other specific structures.
- Permit and Inspection System:**
 - Local government must establish a list of qualified inspection agencies.
 - Building owners must notify relevant authorities before demolition or modification work.
 - Inspections are conducted by certified professionals (Architects, Engineers, Technicians).
- Implementation Timeline:**
 - Law takes effect on May 1, 2020.
 - Regulations will be issued by April 1, 2020.
 -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inspection agency lists by June 1, 2020.
- Support Measures:**
 - Training programs for professionals.
 -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spection agency list.
 - Development of inspection standards and guidelines.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녹색도시과, 2020.02.11.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균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균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
국토교통부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균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하여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공포

지역개발과, 2020.02.13.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중대 변경요건에서 경미요건으로 완화

지역정책과, 2020.02.25.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절차: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협의(실현가능성 검증 병행)→국토정책위원회→국토부장관 승인→고시
- * 경미한 변경절차: 변경(안) 마련→국토부 사전 협의→고시

구분	기준	변경
지역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가 30억 원 미만의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 10% 초과 시 소관기관 협의를 거친 경우를 인정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가 30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 10% 초과 시 소관기관 협의를 거친 경우(국비지원 사업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변경액이 10% 초과 시 경미한 변경을 국비지원 사업에 한정하는 단서를 삭제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 규제샌드박스 시행

지역정책과, 2020.02.25.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오는 2월 27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며,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입법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2020.02.17.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1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내용은 그 동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던 도시지역 3만 m^2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m^2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제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어촌관광휴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면적 30만 m^2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m^2 이상인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사전경관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일인 6월 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문체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발표

지역문화정책과, 2020.02.10.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0일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꽂피우기 위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관 기관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의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대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위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실시

도시정비과, 2020.02.18.

  대구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정비예정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시행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10년간 대구시의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내년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먼저 정비예정구역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4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주민들이 정비를 원하는 곳의 현황을 파악해 예정구역지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제1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건축디자인과, 2020.02.17.



경기도가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공공디자인’을 비전으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 토록 한 광역 법정계획으로, 법 제정 이전 수립된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상위 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시·군을 함께 이끌어가고 도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디자인’을 목표로 기반구축, 사업추진, 평가체계 확립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6대 기본방향,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충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전략 수립

기획행정부, 2020.02.25.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변화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확대 대상 지역 발굴과 국가정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구상하기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혁신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여건변화 성과 분석,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개발 기본구상안(비전) 수립, 국가 정책 및 지역 핵심전략산업 연계한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 연구기관·기업·투자가·공무원 등이 지속 경쟁·협력 체계로 지속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이다.

서울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자금 올해 160억 융자 지원

주거정비과, 2020.02.11.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19년까지 약 2,200억원을 지원해왔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 최대 15억원 이내이다.

서울시, 건축자산 정책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한옥건축자산과, 2020.02.14.

서울시는 서울의 일상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더하고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공감 확산 및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서울건축자산’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정책 대상을 한옥에서 건축자산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전역의 건축자산을 발굴·조사하고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는 한편, 창의적 활용 지원 및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브랜드의 키워드는 ‘물길’, ‘건축’, ‘도시’, ‘사람’이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른 길이 만들어 지면서 건축과 도시가 연결되고, 이를 통해 역사도시 서울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시민들이 일상공간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서울시, '기생충' 속 '반 지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주거정비과, 2020.02.18.



서울시가 영화 <기생충> 속 공간적 배경이 된 '반 지하' 주거형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업해 올해 반 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500가구 이상에 단열, 냉방 등의 맞춤형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수리 사업은 반지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① 단열시공, ② 보일려설치, ③ 에어컨설치, ④ 창호설치, ⑤ 바닥교체 공사와 더불어 반 지하 가구의 수요가 많은 '창문 가림막', '제습기', '화재 경보기', '환풍기' 등의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대구시, 빈집 1만여호 전수조사 실시

도시정비과, 2020.02.12.



대구시는 빈집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흉물로 방치된 빈집 30동을 우선 정비해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3월경 실시하는 대구시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전수 조사로, 효율적인 조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군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상수도 및 전기 사용량을 근거로 추정한 빈집 11,949호를 현장 방문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구조부 상태와 위해성에 따른 등급을 산정한다. 또, 소유자 면담을 통해 빈집 발생 원인과 향후 조치 의견, 빈집정보공개 등의 여부도 함께 파악한다.

대구시는 오는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구시, 시민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대

공원녹지과, 2020.02.13.



대구시는 올해 1,4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민의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과 공원을 조성해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대한다.

우선 두류공원 일대에 대구 대표숲과 힐링숲 등 8만m²를 조성하고, 숲을 활용한 미세먼지 흡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 바람길숲*도 함께 만든다.

* 바람길숲 : 대기 순환을 유도하여 도시외곽의 맑은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의 오염된 공기,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숲

또, 북구 노원동 3공단과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주변에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 미세먼지 차단숲 : 산업단지, 소규모 공장 지대 주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 먼지를 차단·흡착 효과를 나타내는 숲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 3만4천m²에는 진입광장, 주차장, 수변 산책로 등을 새로 만들고 생활환경숲과 명상숲 17개소도 조성한다.

인천시, 2020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건축계획과, 2020.02.21.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입주자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검수제도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입주예정자와 함께 점검하는 제도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16개 단지 1만4천여세대를 목표로 품질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

도시경관과, 2020.02.12.



대전시는 서구 월평로 34번길(월평동) 일원에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을 도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민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2020년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섬말어린이공원 개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안심벨, 반사경, 로고젝터 등을 설치하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CPTED) 선도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대전시, 도심 내 훼손지역 생태 휴식공간으로 조성

기후변화정책과, 2020.02.13.



대전시는 환경부의 2020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서 동구 가오근린공원 내 도심형 생태플랫폼 조성사업과 서구 구봉산 가장자리 숲 치유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납부금을 50%까지 반환받아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보전 및 복원하는 사업

이번에 선정된 동구 가오근린공원 내 도심형 생태플랫폼 조성사업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동서로 산림이 단절돼 있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이 곳에 생태숲을 복원하고 비점오염 저감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구 구봉산 가장자리 숲 치유사업은 산림 내 대규모 불법 경작지 사용으로 인해 생물 서식처가 훼손되고 경관이 훼손된 곳이다. 시는 이곳에 생물 서식지를 복원해 자연치유 공간과 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시, 2020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사업 본격 추진

공동체정책과, 2020.02.13.

진행

도시
정책

대전시는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그룹을 중심으로 ‘2020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은 마을의제발굴 → 마을조사 → 마을계획 → 마을총회 → 실행 및 평가를 진행해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주민자치역량과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2월 10일부터 28일 까지 3주간 사업공고, 사업설명회와 사업 컨설팅 후 사업에 적합한 30여개 동의 공동체를 심사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2020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추진

안전기획과, 2020.02.19.

진행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안전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활환경내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2020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발굴·해소해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30개 시·군 서민주거지역 중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총 16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범죄예방, 화재예방,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5개 분야 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안전시설이 대상이다.

충남도, 중부물류센터 '소통협력공간'으로 탈바꿈

공동체정책과, 2020.02.17.

진행

도시
정책

문화
관광

천안시에 위치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도민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인 '충남혁신상회'로 새롭게 단장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에서 중부 물류센터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 3년간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스페인 소도시 빌바오 '사회 혁신파크 실험 모델' 및 '서울혁신파크'처럼 지역민, 시민단체, 청년 등의 참여 속에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실현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이다.

도는 2022년까지 중부물류센터 공간(2~3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충남 혁신상회'로 간판을 바꾼다. 이곳에서는 공동체·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 규약을 통해 소통·협업하면서 청년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등이 선순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창업공간을 비롯한 소통·협업(코어킹) 및 레지던시 공간, 로컬푸드 오픈마켓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 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경남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규 추진

건축주택과, 2020.02.24.

진행

건축
정책

안전

경상남도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 지원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화재사고는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의무화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사업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다.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외부피난계단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보강 해야 한다.

새만금청, 현실 도시문제 예측 위한 가상도시 구축·활용

국제도시과, 2020.02.11.



새만금개발청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실계획과 동일한 가상(디지털)도시를 만들고, 가상도시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도시문제를 예측,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지난 6월부터 「새만금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용역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수변도시에 지하시설물 조성단계, 건설단계, 도시운영단계 등 추진 단계별로 디지털 트윈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불공정·과열 경쟁 선제적 조치

주거정비과, 2020.02.17.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뿐리뽑는다는 목표다.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 후에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적·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4차산업혁명 녹아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교통정책과, 2020.02.17.



대전시에 4차산업혁명의 각종 기술이 녹아든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2월 17일부터 6월말까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주차정보제공,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 등 시민 교통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 교통 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전망이다.

* ①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긴급차량 교차로 진입 시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 ②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주요 교차로 13곳에 대한 교통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호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 신호운영에 적용, ③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주차장 위치, 주차장 여유면 등 주차 공간 현황을 실시간 제공해주는 시스템

대전시, 전국 최초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운송주차과, 2020.02.27.



대전시는 시·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민간부설주차장, 민간유료주차장 등 주차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은 4년 간(‘20 ~‘23년) 32억 원을 투입해 114곳의 유료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인식기, 차단기,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장시설물 설치, 주차정보공유 통합 플랫폼 구축, 공영주차장 표준요금징수프로그램 개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한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시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내비게이션업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주차장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경기도,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집중관리 계획

안전특별점검단, 2020.02.18.

진행

건축
정책

안전

경기도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해 원격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에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국비 8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포함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올해 안으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시스템을 일괄 도입한다.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는 안경 형태의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서 시설물 위험요인 등을 둘러보면, 전문가 등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현장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수·보강 대책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글라스에는 증강현실(AR) 및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물을 측정하거나 실제 이미지와 기존에 저장돼 있는 이미지를 비교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상태 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도 들어 있다.

여기에 도는 원격 안전점검이 실시된 시설물 중 중대결함이나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센서를 부착해 변위 등을 상시 계측하고, 허용치 초과시 위험을 관리주체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설물 및 점검결과에 대한 추적정보 등 DB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통합관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가동

공공택지과, 2020.02.21.



건축
정책

경기도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공건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종별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산 절감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설치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 이후, 경기도 시공사 소속 전문인력 4명으로 구성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공공건설기획 업무의 수행,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설의 발주, 기획 및 관리, 공공건설의 디자인 관리 방안, 공공건설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공공건설 발주 전 설계조건 및 적정 공사원가 산출 지원, 공공건설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제주도, 대중교통 이동형 IoT 통합 정보 구축

디지털융합과, 2020.02.06.



도시
정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안전부 20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동형 IoT 통합 정보를 구축,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 국가중점데이터: 매년 국민, 기업 등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데이터 활용도와 중요성 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선정하고, 품질개선·DB구축·오픈API개발 등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부기관 후 개방하는 양질의 데이터

제주도의 ‘대중교통 IoT 통합 데이터’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가중점 데이터로 선정되었고, 국비 7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지난 1월에 완료되었다.

제주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고가치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실생활에 직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고정밀 위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로 개방한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56
ISSN 2635-5140